

# 전남도,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한층 강화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키로

### 독립운동사 편찬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정책도

전남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전남도는 올해 목표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보훈정책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

책의 초점을 맞췄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돋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고령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전남도 지급분에 시군 참전명예수당까지 더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2029년 국립장릉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설치된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했던 이용 범위를 배우자까지 넓혀, 제도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에 그치

지 않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1895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까지 전남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계체

적으로 정리한 전남 독립운동사를 2027년 발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전남 보훈정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보훈의 가치를 역사와 일상 속에서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하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가 생활 전면에서 이어지도록 정책 보완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함께 만들자”

###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시민 1만여명 발길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행정통합 성사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과 부강한 광주·전남의 비전을 제시했다.

1. 2부로 나눠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는 강 시장의 새로운 저서 '광주, 처음 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을 선보이자였다.

이날 행사는 별도의 공식 식순 없이 행사를 찾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이 그간 보여준 시정운영과 정

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시민 1만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전

남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김영록 전남

도지사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했다.

문화인 전 대통령 축전을 비롯해 우

원식 국회의장, 정경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

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오갑 김대중재단 이사

장 등이 영상으로 출간을 축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저의 25년 정치 여정에서 가장 기술적 정도의 큰 편”이라며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와 함께 ‘조금 큰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인생에서 기술 레벨 만큼 큰 판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 선택이 바로 광주·전남 대통합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광주가 민주주의로 역사

에 첫 번째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AI, 미래자, 반도체 등 산업을 축으로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두 번째 극적인 등

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영록 도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정체성인 광주·

전남의 엄청난 산업 발전을 약속했다. 강 시장과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시도만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저서에는 12·3비상계엄의 밤, AI 중심도시 광주의 탄생과 현재, 대한민국 불법폐리다임을 바꾼 ‘광주다음 통합돌봄’, 대한민국 표준이 된 광주시

혁신정책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온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부강한 도시 광주’로서의 두 번째 등장이 필요하다”며 “12·3비상계엄, 경제위기 등 어떻게 오늘의 위기를 돌파하고, 인공지능(AI), 미래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

로운 성장과 기회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

고 있는지를 기록했”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아이 꿈 키우는 광주 희망장난감도서관 ‘인기’ 전남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문턱 낮춘다

### 지난해 이용 6108건…가입자 증가세

광주시청 내 자리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돋우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육아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명의 부모가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가입했으며, 총 이용건수는 6108건을 기록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2023년 378명, 2024년 463명, 2025년 54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중 75%(410명)는 최초 가입자로, 장난감도서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시청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최장 3주일 까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육아 지원시설이다. 지난 2015년 개소해 운영 10주년을 맞았다. 회원가입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연

회비는 3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조록우산아린

이재단과 함께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도서관

에 상주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초록우산

아린이재단이 기부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한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 부모들

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세 이하 영유

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장난감에 대한 흥

미와 필요가 빠르게 달라지는데,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발달단계별로 장난감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현재 미끄럼틀·트

램펄린 등 888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

다. 이 중 지난해 확충한 장난감은 153개

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전남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보강했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자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를 비롯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 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하거나 우편,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을 통

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조’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인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자본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 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족간 특례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는 미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청구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 군수는 지난 9일 “그동안 당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징계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원 리심판원이 상정한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심은 민주당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심이 기각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 공천 심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